

민주 '학자금 무이자' 등 입법 속도전

정기국회 처리 주요 법안 정리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도 처리

노란봉투법 거부권뎌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자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 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빛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회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법률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년 관련 법률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이해충돌' 검증

"허위신고 발각되면 후보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당 후보의 검증 단계부터 보유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 의무화로 이어진 '가짜 코인 보유-거래 논란'과 같은 사례를 내년 선거에서는 후보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총선기획단 2차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후보자 검증위) 단계부터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두고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 이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 가상자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각되면 후보 탈락을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아울러 각 지역구의 민주당 예비 후보자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받은 예비 후보자 전원의 경력, 학력, 사진,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공개하겠다"며 "당원뿐 아니라 국민이 볼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공천 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 등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혁신안을 반영할지는 앞으로 별도 토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尹, 중립 위반 이원석 검찰총장 해임해야"

"특수검사 지키기, 하나회 방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법외대응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며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밖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는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채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하나분식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온 김동연 경기지사 "김포 서울편입은 지방 죽이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국밥 조찬'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광주를 찾아 김포 서울 편입 논의에 대해 "지방 죽이기, 선거용 속임수"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떻게 지방 메가시티를 지혜롭게 잘해 나갈지 비전과 여러 정책 방향을 듣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지 서로 의논해보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양동시장 국밥집에

서 가진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김포 편입은 정책적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지방분권-자치 측면에서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힘을 모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활력을 띠는 곳"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도 연계 신재생 에너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화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두 단체장이 만나 아침식사를 함께 한 식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대선 직전 다녀간 뒤 '노무현 국밥집'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지난 5월 경기도-광주시 상생 협약 후 인공지능(AI), 첨단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오후 광주에 내려와 지역 대학생·청년들과 만났으며, 이날 오후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리는 "2023 광주-전남 출산 돌봄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노형욱 "R&D 예산 복원, 연구 인력 집중돼야"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여당 방침은 다행이지만, 여론을 의식한 '무늬만 복원'이 아닌 연구 인력에 집중된 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노 소장은 여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R&D 예산 복원은 특성상 연구 인력 예산 복원에 집중돼야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여당 복원 방침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확대와 대학 연구기관 신행기자재 지원,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R&D 특성상 기자재보다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단기 성과) 사업이나 기관별 고유 사업 등에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와 단계별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이다.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 개발 적립금이 있는 경우 부담이 덜하지만 적립금이 부족한 기관 등에서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이 연구 성과를 담보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노 소장은 "연구 인력 감원은 R&D 과제 부실화, 연구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최소한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